

【 2017.7.6(목) 강원일보 】



도 건설산업 발전 간담회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5일 원주시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을 방문해 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최근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응급복구 대책을 협의했다.

【 2017.7.6(목) 강원도민일보 】



대한건설협회 도회,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과 간담회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5일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을 방문해 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 SOC 발굴, 중소기업 일감 확보해줘야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도로, 건축 등 건설산업 일감을 확보해줘야 합니다.”

정성욱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장은 국내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생산과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건설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건설산업은 지역경제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 SOC 감축과 이에 따른 내수 건설시장 위축은 지역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키워 경영난을 부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관산업이 동반 침체돼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혼잡도로 정비와 노후 상수도관 개량 등 생활형 SOC 사업과 구도심 개발, 노후 공공시설 정비, 지역단위 방재시설 확충 등 지역 주민 수요가 많은 중소 규모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사업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는 대전시를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꼽았다. 대전은 과학 도시로 국가 및 기업 연구단지가 많고 KAIST 등 우수한 대학이 많은 곳으로, 세종시 건설로 대전의 기업과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화된 대전지역 산업을 최첨단 산업으로 탈바꿈시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지역 건설업계 역시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약에서 빠졌지만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으로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건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속 추진 등을 꼽았다.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위축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뿐



건설 살아야야 저성장 탈출 대전은 4차산업혁명특별시 노후 인프라 정비로 제도약

만 아니라 신탄전역에서 계룡역까지 이동시간이 30분으로 단축돼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이유화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현 법제판소 헌법불합치 판결로 오는 2020년 7월2일자로 공원 지정이 해제될 상황에 처해 있어 해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공원 지정에서 해제되면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시 전체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자본이 투자된다면 정부가 추구하는 주거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건설산업 신수요 창출로 이어져 새 성장동력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SOC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데다 주택시장 규제 정책으로 민간과 공공 건설수주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몰락 가뭄을 해소할 단비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이와 연계해 건설업계는 노후 인프라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개선을 위한 법 제정과 지자체 노후 인프라사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6개 권역별로 나눠 신규 및 인프라 사업 조사에 착수했다.

정 회장은 “이 같은 노후 인프라의 체계적 관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 인프라 관리와 지방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낮은 인프라 성능을 개선하려면 새로 건설하는 것만큼 자금이 들어가는데,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 재원으로 안전·재무차 특별회계 신설이나 부담금·정책금융·민자유치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현안 건설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로는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 △간접비 보상제도 현실화 △분리발주지양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축소 등을 꼽았다.

정 회장은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제값 주고 제값 받는 건설문화 풍토 조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대상을 300억원 이상으로 축소하고,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을 통해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간접비 지급 등 업체 수익성 확대가 기술 개발로 이어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공사 분할 발주와 공동도급 확대, 분리발주 지양 등에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성준기자 newspia@

‘특정공법 온라인 등록’ 아직은...

서울시가 신기술·특허 등 특정공법(제품)과 관련해 업체의 마케팅 및 홍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온라인 등록 제도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자체 운영 중인 건설정보 웹사이트 ‘건설알림이(cis.seoul.go.kr)’를 통해 특정공법 등록을 받

서울시, 지난달 10일부터 시행 오프라인 등록 건수의 20% 수준 수주 위해 필수... 市 “아직 초기”

고 있다. 특정공법은 시에서 시설회사를 수행할 때 특정공법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지정하는 것으로, 관련업체들은 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을 일단 시에 등록해야 수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번 건설알림이를 통한 특정공법 등록은 지난해 1월부터 진행했던 오프라인 등록을 온라인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홍보용 카탈로그와 샘플을 들고 시를 방문할 필요가 사라졌고, 무엇보다 등록된 기술 모두를 심사 대상으로 놓고 평가하기 때문에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약 한 달 가까이 온라인 등록을 접수한 결과, 등록 속도는 다소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까지 29개 분야에 총 180건의 특정공법이 등록된 상태이다. 이는 시가 그동안 오프라인을 통해 등록을 받은 공법 수의 약 20% 수

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절반가량은 시행 초기 시범운영 차원으로 시가 업체에 연락해 등록한 것이다.

분야별 등록 수는 천차만별이다. 신축이음은 32건으로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인 반면 결빙방지·교량바닥판·안전시설물·조경 분야는 단 1건의 등록도 없었다. 가로등·계측/검측·교량점

검시설·케이블·현타말뚝 등은 등록 건수가 1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이다. 한 달 가까이 됐다고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23일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로 한 열흘 정도 지났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하루에 열 개 안팎의 공법이 등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업체가 직접 등록을 해야 하는 점이 시행 초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온라인 등록이 공정하고 투명한 수주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해당 분야의 특정공법선정심사위원회를 앞두고는 거의 모든 업체들이 등록을 마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시 특정공법(제품)선정심사위원회는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 3개 항목의 기술적 평가(50점)와 가격평가(50점), 기업신용등급, 신기술 보유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공법(제품)을 선정한다.

정희훈기자

오인철 건설 강원도회장,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방문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사진 왼쪽 다섯 번째)은 5일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을 방문해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최근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응급복구대책을 협의했다.

지자체, 교량 재가설 공사 증가 속 특정공법 발주방식 하도급도 확대

노후 교량을 대체하는 지자체발 교량 재가설 공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공법의 발주 방식 중 하나인 하도급 방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등 완공 이후 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건설경제>가 나라장터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까지 올 상반기에 일괄 공고된 교량 재가설 공사는 74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하반기가 남아 있음에도 지난해 물량(86건)의 86.04%에 달한 것이다. 교량 재가설 공사는 각 지역의 노후 교량을 해체하고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는 공사로, 2015년 54건에 이어 증가 추세에 있다.

눈여겨볼 점은 신기술·특허 등 특정 공법이 포함된 이른바 하도급 공사 역시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5년 7건에 불과했던 하도급 공사는 지난해 1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6건이 발주돼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몇몇은 공사 규모도 크다. 올해 나온 공사 가운데 경기도건설본부가 지난 1월 발주한 삼팔교 재가설 공사의 공사비는 52억원(이하 기초금액)에 달했다.

2015년 7건 → 지난해에는 13건
올 상반기엔 6건 발주, 증가 추세
구매 방식보다 하자관리에 유리

지자체 교량건설 공사는 '교량공사'와 교량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로 나누어 따로 발주하는 게 일반적이다. 여차와 교량 공사는 전문업체들이 도맡아 수행하는 만큼 거더 구매 등으로 발주하고, 나머지 공사는 지역제한으로 발주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교량공사는 공사가 아닌 구매에 속한다. 설치조건부 구매를 통해 관급자재로 지급하기 때문에 관급자재 방식 또는 구매 방식으로 불린다.

반면 하도급 방식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공법을 선정된 뒤 공법 보유 업체와 협약을 맺고 공사의 임찰공고문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 후 공법 보유 업체와 하도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두 방식은 서로 일장일단이 있다. 경남권의 지자체 관계자는 "관급자재 방식은 번거롭지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하도급 방식은 공사 낙찰자가 교량전문업체를 하도급사로 두기 때문에 하자 관리에 유리한 점이 있다"면서 "준공 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하도급 방식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업체 입장에서는 구매 방식을 선호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구매 방식은 발주처와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반면 하도급 방식은 공사의 낙찰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털어놨다.

일각에서는 하도급 방식의 증가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아무래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구매 방식은 부정이 개입할 개연성이 높다. 일부 지역에서는 구매 발주를 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구매 방식으로 발주된 교량공사는 160여건에 이르렀다. 거더 구매가 시차를 두고 발주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중 재가설 공사는 5건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량공사 전체로는 구매 방식이 압도적이지만 재가설 공사로 한정하면 크게 격차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정희훈기자 hoony@

'철근 기준가격' 폐지 현실화

철근 '빈익빈 부익부' 중소 건설사 직격탄

가격책정 상한선·안전판 상실
자재 조달·원가부담 높아져
중소 제강업체도 타격 우려

철근 기준가격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건설업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 우려가 크다. 철근을 대량 구입하는 중대형사와 달리 유통업체로부터 소량을 구매하는 중소건설사의 건설현장에 철근 조달의 어려움과 원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경고를 의식한 현대제철이 철근 기준가격을 폐기하고 대신 3분기 철근 판매가격을 단독으로 결정하면서 건설업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철근 수급 상황이 악화일로인데, 가격 책정의 상한선 겸 안전판 역할을 한 기준가격이 폐기되면 사용량이 적은 중소건설사로서는 뚝뚝을 취할 필요도 철근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 업계 중론이다.

중견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수급 상황이 어려워 유통단가가 높는데, 완충판까지 사라지면 국내 철근 판매량(연 1100만t) 중 유통시장을 통해 팔리는 250만t에 의존하는 중소건설사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급난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제강사들이 생산한 철근은 턴키 방식으로 구매하는 대형건설사에 우선 배정된다. 대량구매하는 고객이기 때문이다.

철근 유통사의 한 임원은 "연간 판매량 중 절반가량인 600만t이 턴키 방식으로 중대형사에 우선 공급되면서 유통시장에서 가장 흔했던 8

m짜리 표준규격 철근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준가격이 폐기되면 중소건설사뿐 아니라 철근 유통 중소기업들의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어려움 속에 건설업계 관심은 동국제강과 대한제강 등 나머지 6개 제강사들이 결정할 철근 단가로 쏠리고 있다. 가격협약체가 존속했던 지난 상반기까지 현대제철과 같은 가격을 기준으로 썼지만, 이제는 공정위 눈치를 봐야 하는 탓이다. 현대제철보다 높은 가격이면 건설업계 반발을 사고, 낮은 가격이면 극심한 철근 공급난 속에서도 수익을 개선할 기회를 놓친다.

건설사의 한 자재부장은 "가격협약체 구성 이전처럼 7대 제강사의 철근가격이 t당 1000원 차이를 보이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느냐"며 "철근 시황이 썩어지면 기준가격 폐기가 반대로 중소 제강사들한테 타격으로 돌아올 것이다. 과거 가격협약체 구성과 가격협상을 제강사가 먼저 요구했던 이유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다. 공정위의 핵심 업무는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지키는 것이지만 을(乙)의 보호도 핵심 업무 중 하나다. 그런데 기준가격 폐기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후유증을 낳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철근가격 협상의 담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며 "철근가격 협상이 담합으로 결론이 난 경우 건설사들로서는 동일한 방식의 전국 권역별 레미콘 가격 협상도 모두 중단하고 입찰에 붙어 최저가로 구매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국진기자 jinny@